

나주SRF 전격 가동...나주시장·주민들 항의 방문

지역난방공사, 준공 후 3년만에...저출력 상태로 점점 내주 정상 가동 나주시 "최종심 전, 모든 책임 한탄이 질 것"...난방공사 "적자 350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빛가람동에 설치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전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5일 법원이 SRF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준 지 40여일 만이다.

26일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SRF발전소 가동에 돌입했다. 하루 440t의 SRF를 투입하도록 설계됐으나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20% 수준인 100t을 이날 투입하는 등 저출력 상태의 운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경영진, 이사회 회고를 거쳐 SRF발전소 가동에 돌입했다"며 "저출력 상태의 운전을 이어가며 SRF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영향, 기계 결함 여부 등을 살핀 뒤 다음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방공사 측의 전격적인 SRF발전소 가동을 두고 놀란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의 1심 판결 뒤 곧이어 나주시가 항소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나 가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발전소 운영사가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는 점을 두고도 주민 친화적 경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SRF발전소 가동 소식이 퍼지자 강인규 나주시장과 공무원, 주민 등 20여명은 발전소로 달려와 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난방공사 측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강 시장은 입장문을 내어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한 상태에서 한국난방공사의 가동 강행은 공공의 이익에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난방공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 맞게 시설이 지어졌고 주민 단체가 참여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가동 중 환경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지역사회와 대화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시설 준공 후 3년 이상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적 적자가 350억원에 이르고 상장기업으로 일반 주주의 훼손에 따른 배임 논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난방공사 측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가동과 관계없이 그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난방공사가 SRF발전소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준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26일 전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광주지법이 SRF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으로, 나주시는 "법원의 최종판단 전, 가동 강행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공 후 3년여 만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직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주민 반대로 멈춰섰다.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를 나주에 반입하는 문제에 대한 항의,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고, 나주시도 '공약' 등을 명분 삼아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광주지법이 지난 4월 "나주시의 SRF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난방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발전소 시설 자체는 사업계획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나주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실직자 등 단기 일자리 참여자 모집 31~6월 4일까지 653명

광주시가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 실직자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225개 분야, 65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별로 2~5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 취약 계층,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이 다.

주 15~25시간 일하고, 최저 시급 8720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치구는 신청자들의 재산·소득·공공일자리 참여 경력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고, 6월28일 개별 통지한다.

사업별 선발계획 대비 미달일 경우에는 타 사업 지방자치 후순위 대기자 중 본인 동의 등을 얻어 유사 사업에 배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5개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부서 또는 각종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에 7600억 규모 포스코 리튬공장 착공

전기차 배터리 이차전지 원료 확보...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26일 광양만권 울촌산업단지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의 리튬 생산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이차전지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경호 광양 부시장, 김갑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스코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포스코와 지난 5월 광양만권 울촌산업단지 19만6000㎡ 부지에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의 리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7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신속한 투자 실행을 위해 공장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포스코가 이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위해 광양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리튬광산을 보유한 해외

광산업체가 지분투자(30%)로 참여할 예정이다.

광양 리튬 생산공장은 2023년 준공, 260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해 연간 4만3000t의 리튬을 생산한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의 세계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12만1000t에서 2030년까지 143만5000t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장 착공에 따라 안정적 원료 확보와 연간 37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김 지사는 "포스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

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라며 "해상풍력산업과 함께 이차전지 소재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에 233억원을 들여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산업부 지원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단대개조 사업으로 총 4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 반영 촉구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인천에서 열린 '2021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과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추경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대규모 재해, 지역경기침체, 주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사유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잦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 4일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

의회의장의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이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이 채택돼 집행부(광주시)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서화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중기부, 광주와 대전에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광주와 대전에 엔젤투자 지원 기관인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개소했다.

엔젤투자는 잠재적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 도산하는 1~3년차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종자돈(Seed-Money)을 투자하고 경영 자문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엔젤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엔젤투자 협회가 맡으며, 광주와 대전에 지역 허브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선 투자유치 희망 기업 발굴, 기업 투자계획서 작성법과 투자설명회 지도, 창업자-투자자 간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등을 맡는다.

특히 광주에선 지역 특색에 맞춰 인공기능, 그린 뉴딜 분야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해 지역 우수기술의 기술창업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전체 엔젤투자액 6328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5166억원으로 81.6%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62억원(18.4%)에 불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